

연구윤리와 논문작성을 위한 인용방법



J. K. JEONG

**PROF. PH.D. IN LAW
LAW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IEF
KNU ART&LAW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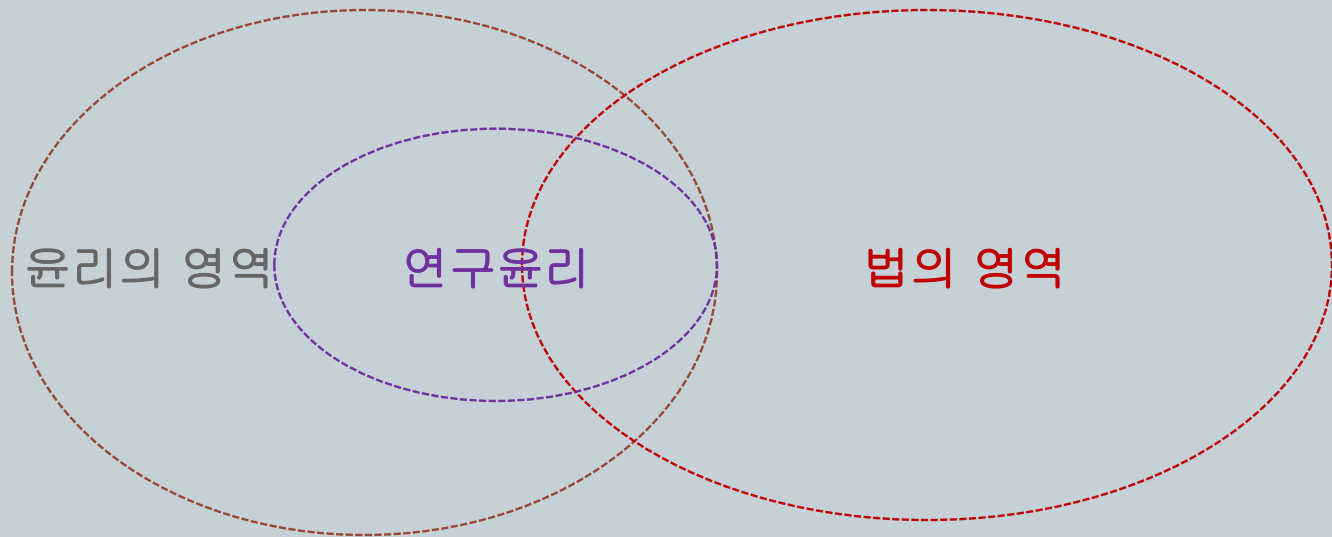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연구윤리를 위한 문제의 제기!

2

- 연구윤리는 윤리적 문제인가? 법적 문제인가?
 - 자기표절은 윤리적 문제인가? 법적 문제인가?
- 연구윤리의 목적은 윤리적 일탈의 방지인가? 학문 발전인가?
 - 자기표절은 윤리적 허용범위를 일탈하는 행위인가?
 - 자기표절은 학문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인가?
- ❖ 연구윤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

연구윤리와 법의 관계

3



- 연구윤리 문제는 윤리의 문제라는 근본적 성격을 갖는 동시에
 - 윤리적 관점에서 연구윤리 위반의 실체를 정립해야 함
- 해결수단을 법의 영역에서 찾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윤리 위반을 '비난'이 아닌 '처벌'하는 경우 신중해야 할 것임!

표절 논란의 사례

4

우상의 어둠, 문학의 타락 — 신경숙의 미시마 유키오 표절

두 사람 다 실로 건강한 젊은 육체의 소유자였던 탓으로 그들의 밤은 격렬했다. 밤뿐만 아니라 혼란을 마치고 휴먼지부성이의 군복을 벗는 동안마저 안타까와하면서 집에 오자마자 아내를 그 자리에 쓰러뜨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레이코도 잘 응했다. 첫날밤을 지낸 지 한 달이 넘었을까 말까 할 때 벌써 레이코는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고, 중위도 그런 레이코의 변화를 기뻐하였다.

— 미시마 유키오, 김후란 옮김, 「우국(愛國)」, 『金閣寺, 愛國, 연희는 끝나고』, 주우(主友) 세계문학20, 주식회사 주우, P.233. (1983년 1월 25일 초판 인쇄, 1983년 1월 30일 초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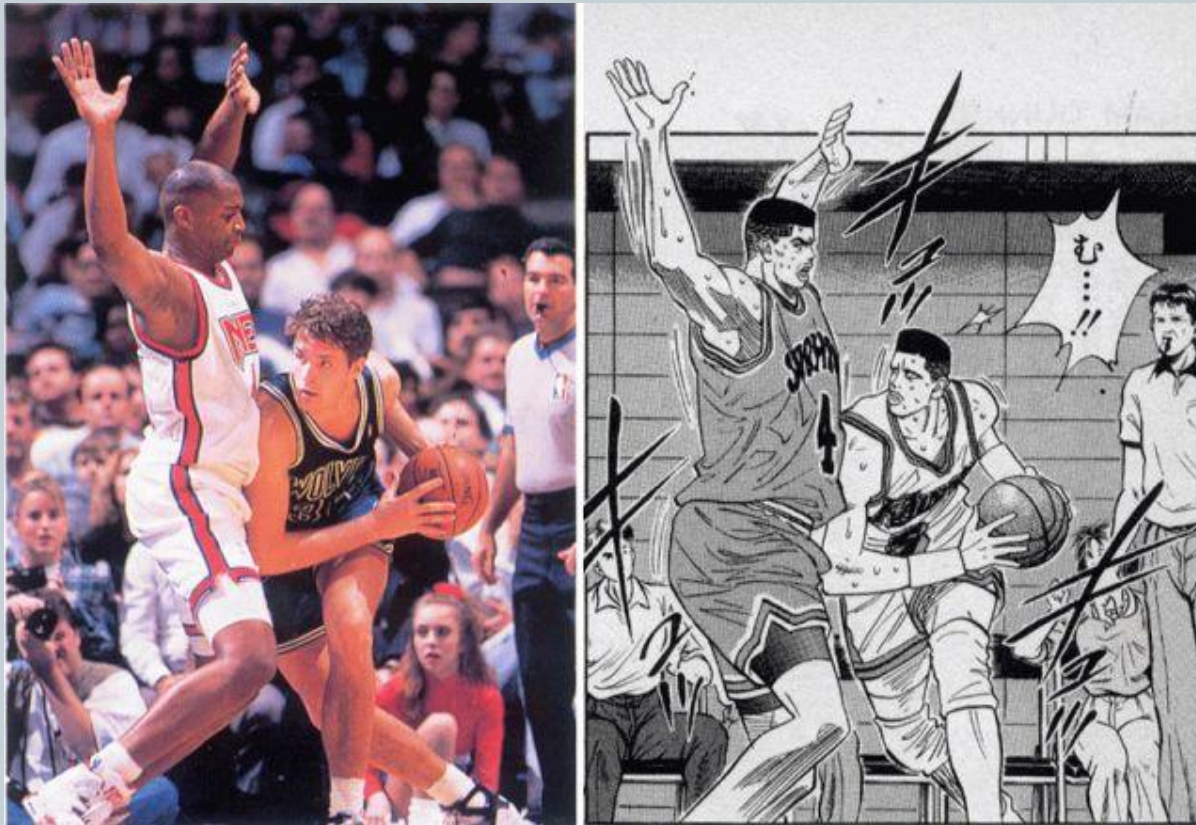
두 사람 다 건강한 육체의 주인들이었다. 그들의 밤은 격렬하였다. 남자는 바깥에서 돌아와 휴먼지 문은 얼굴을 씻다가도 뭔가를 안타까워하며 서둘러 여자를 쓰러뜨리는 일이 매번이었다. 첫날밤을 가진 뒤 두 달 남짓, 여자는 벌써 기쁨을 아는 몸이 되었다. 여자의 청일한 아름다움 속으로 관능은 향기롭고 풍요롭게 베어들었다. 그 무르익음은 노래를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 속으로도 기쁨지게 스며들어 이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여자에게 달려오는 듯했다. 여자의 변화를 가장 기뻐한 건 물론 남자였다.

— 신경숙, 「전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창작파비평사, P.240-241. (1996년 9월 25일 초판 발행, 이후 2005년 8월 1일 동일한 출판사로서 이름을 줄여 개명한 '창비'에서 『감자 먹는 사람들』로 소설집 제목만 바꾸어 재출간됨.)

이응준 작가 블로그 캡처([비바]100 2015.6.19일자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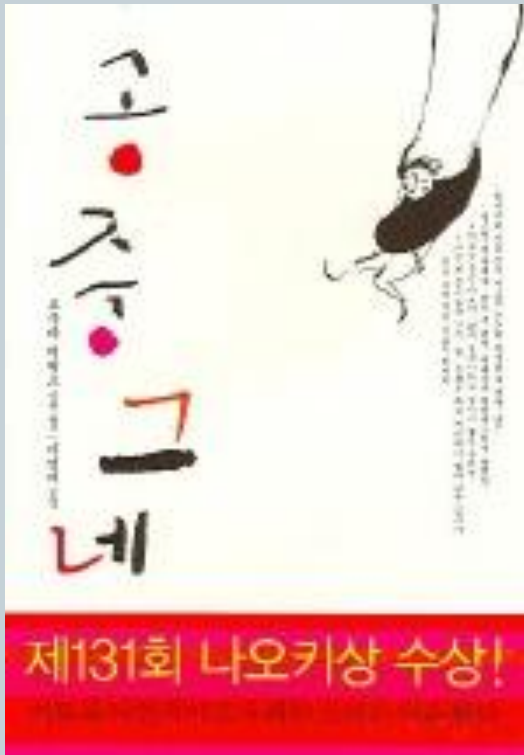
표절 논란의 사례

5



과도한 연구윤리의 문제점 – 자기표절의 공포

6



책상에 앉아 이이서 원고를 썼다. 아무래도 안정이 되질 않았다. 못 보고 지나친 건 없을까.

아이코는 일어섰다. 다시 책꽂이 앞으로 갔다. 쫓기는 듯한 초조함에 휩싸여 맹스피드로 저작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상하다는 건 스스로도 안다.

그 순간, 목구멍으로 뭔가 시큼한 게 올라와, 아이코는 황급히 화장실로 뛰어갔다.

가벼운 구토를 한다. 설마, 또 온 거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2년 만에 찾아온 심인성 구토증이다.

연구윤리 그리고 표절이란 무엇인가?

7

❖ 연구윤리 ⊃ 표절, 위조, 변조

-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하는 학문적 부정행위를 의미 하였음. ‘타인’을 표절판단의 주요 구성요건으로 하였음.
- 정치적, 사회적으로 표절에 대한 몰이해와 도구화로 표절의 의미가 변질
- 현재 시점에서의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양 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기존 창작물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창작물로 보이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가?

자기표절은 표절인가 : 연구윤리기준의 검토

8

- 교육부에서는 학술진흥법을 근거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2006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
 - 2012년 과학기술부 훈령을 개정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
 - 2015년 교육부 훈령으로 개정(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 훈령은 내부규정으로서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가주도적 규정으로서 표절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반영함

2006년 과학기술부 훈령

9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0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1

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2015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2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2015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3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2015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4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자기표절은 표절인가 : 연구윤리기준의 검토

15

- 연구윤리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자기표절은 없다!
 - 중복게재도 없다!
 - 부당한 중복게재만이 존재! 중복게재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윤리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부정행위 외에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권고적 규정
 - 분명한 것은 제5조 위반이 연구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것임!!!
- 연구윤리지침 제13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제12조에 정한 행위일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에 정한 행위가 ‘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인지 더 살펴보아야
 - 행위시점, 고의, 양과 질, 학계관행,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자기표절은 표절인가 : 판례의 검토

16

- 표절, 자기표절에 대한 법률은 없음
- 타인표절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률이 존재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학계의 자치를 존중함
 - 법원이 표절에 대한 징계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自治를 존중하는 것
 - 법원이 표절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님!
 - ❖ 학교 등 자치행위가 적법한 수준인지를 평가!
- ❖ 따라서, ①학계는 스스로 그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고, ②비난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함!!!
 - ❖ 현실은 ①상대적 기준을 토대로 비난하고, ②무조건적 강도높게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 ❖ 실제로 ①몇 줄의 자기표절에 대한 비난과 ②무조건적인 해임, 파면

자기표절은 표절인가 : 판례의 검토

17

- 2016년 대법원 판례
 - 표절과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 판례로서,
 - 자기표절을 인정하고 있음!
- 자기표절을 인정한 자치를 인정한 판례이며, 자기표절이 파면할 수 있는 행위인지에 대해 특정한 사례를 판단한 것임
 - 이 사례의 사실관계는 자기표절과 변조를 통해 임용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임용된 사례로서의 특수성이 있음
 - 거짓으로 만들어진 연구성과들을 제외하면 애당초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야 할 사안이자, 거짓말을 고려하면 ‘연구윤리’가 아닌 ‘윤리적’,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임!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18

- [1]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인용의 기준을 제시함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19

- [2]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표절의 고의를 추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20

- [3]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자기표절은 일정한 한도에서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21

- [4]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표절의 판단은 성문의 규정보다는 행위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22

- [5]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 표절의 판정과 표절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의 판단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함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23

-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 제51조 본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나,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박사학위 논문의 사후적 수정

대법원 2016.10.27. 2015다5170

24

- [7]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 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이번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채용의 기준

자기표절은 표절인가 : 판례의 검토

25

- 판례는 자기표절 사례인가?
 - 판례의 사안은 자기표절의 유형 중 중복게재에 이른 문제임
 - 중복게재로 채용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음
 - 따라서, 중복게재에 이르지 않은 자기표절의 문제를 다룬 판례가 아니며, 부당한 이익이 없는 중복게재의 문제를 판단하지 않았음
- 판례는 징계수위를 결정하는가?
 - 판례를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 판례는 징계수위가 적절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징계수위가 적절한 범위를 이탈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음

인용과 연구윤리

26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과 연구윤리

27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고등법원 1990. 2. 13. 선고89나32908판결]

[1]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위 잡지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이나 보도, 비평을 위하여 위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창작물인 누드사진 중 일부를 인용, 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전라 또는 반라인 젊은 여인의 사진 8점 중 일부이고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작가의 사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국 펜트하우스지에 한국의 여대생이라고 소개되어 실린 젊은 여인의 나체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잡지는 이를 밑봉페이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청소년 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 사진의 인용, 게재는 그 방법 및 범위에 비추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 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과 연구윤리

28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2007가합18479판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 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메스비메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인용과 연구윤리

29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95나41279판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 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인용과 연구윤리

30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러디(parody)

[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2001카합1897결정]

이른바 패러디가 당해 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겠으나, 그러한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인용과 연구윤리

31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패스티시(pastiche)

- 패스티시란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부터 거의 변형이 없이 원작을 차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성의 일관되고 세련된 효과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패러디가 상이성을 모방하는 것과는 달리 유사성을 모방하여 전략적인 담론효과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시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현대소설연구(5권), 1996, 226-230쪽)

인용과 연구윤리

32

- 특수한 유형의 인용

- 오마주(homage)

- 오마주란 영화에서 존경의 표시로 다른 작품의 주요 장면이나 대사를 인용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로서,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 장르에도 널리 이용되는데, 존경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패러디나 표절과는 다르다. 도청을 주제로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증을 묘사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의 <도청>은 이탈리아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가 감독한 <욕망>에 대한 오마주이며, 덴마크 영화감독 라스 폰 트리에의 <범죄의 요소>는 독일 프리츠 랑의 <엠>을 오마주한 작품이고, 한국 영화 등에서도 오마주가 이용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인용과 연구윤리

33

- 바람직한 출처표시의 방법
 - 저작권법 제37조
 -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과 연구윤리

34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서명』, 역자명(역), 판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예시)
 - ✦ 홍길동·이몽룡, 『특허법상설』, 제5판, 한세컴출판, 2014, 387면.
 - ✦ 홍길동, “지식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의 제문제”, 송중기(편), 독점규제법 30년역사, 법문사, 2011.

인용과 연구윤리

35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서명(이탤릭), 역자명(역),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저자명, “논문명”, 편저자, 서명, 판차(2판 이상), 권차(2권 이상), 출판사명, 발행연도. 면수
 - (예시)
 -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Intellectual Property Law, Second edition, Oxford, 2004, pp. 25-60.**
 -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Conflict in 000 Case”, Edit. by P. E. Thomas, Antitrust Law, 2nd Edition, Aspen Pub licity, 2010. pp.100**

인용과 연구윤리

36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년), 면수.
 - (예시)
 - ✦ 홍길동·이몽룡,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의 문제점”, 『지식재산연구』, 제1권 제1호(2008), 121-125면.
 -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이탈릭), 권호(년), 면수.
 - (예시)
 - ✦ **Dicaprio, Leonardo & Winslet, Kate, “Antitrust Law”, IIC, Vol.12 No.13(2014), pp.12-15.**

인용과 연구윤리

37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판례는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공보」나 「대법원판결요지집」의 인용방식에 의한다. 외국의 판례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하도록 한다.
 - (예시)
 -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96309 판결.
 - 법률명 제○조 제○항 제○호 ○목.
 - (예시)
 - ✦ 특허법 제41조 제5항.

인용과 연구윤리

38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글쓴이, 「기사제목」, 신문명, 게재일(자).
 - (예시)
 - ✦ 홍길동, 「삼성·SK텔레콤·KT, 빅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가동」, 전자신문, 2013. 1. 23자.
 - 저자명, “기사명”, 사이트명, <주소>, 해당URL작성일자 혹은 검색일.
 - (예시)
 - ✦ 홍길동, “삼성전자 특허대응 프로젝트 가동”, 삼성전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30&aid=0002184515>>, 검색일: 2013. 7. 30.

인용과 연구윤리

39

- 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연구]의 인용방법
 - 저자명, “연구보고서명”, 발행처, 발행년도, 면수.
 - (예시)
 - ✦ 홍길동,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국내 특허 및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 추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 저자명, “자료명”, 발행처, 발행년도.
 - (예시)
 - ✦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2차 회의자료”, 대법원, **2015**

결론

40

- 연구윤리지침과 판례를 토대로 할 때
 - 자기표절은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 중복게재 역시 연구부정행위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연구윤리지침은 부당한 이익을 얻는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
- 학계의 자치와 법원의 법치와의 관계는
 - 법원은 학계의 자치를 존중하는 입장
 - 다만, 학계의 자치로 사적분쟁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보편적인 기준과 특수성을 고려할 것임
- ❖ 따라서, 학계의 보편타당한 기준을 이해하고, 인용의 방법을 적극활용해야 할 것임!

길 잃지 말고 안전하게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41



More Questions? jkjeong@kangwon.ac.kr